



올 목재자급률 15%까지 올린다

- 국내재 420만㎡ 공급계획 “벌채·산물수집 예산확대”...
신규투자도 늘릴 것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올해 국내에서 필요한 목재 중 국산재 공급을 지난해보다 늘려 목재 자급률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이 파악한 올해 우리나라의 목재 총 수요는 2799만6000㎡, 이 중 국산재 공급을 지난해 365만㎡있던데서 15% 늘어난 420만㎡로 늘린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5.7%이던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벌채확대와 산물 수집강화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0년 전의 2.7배인 13.6%까지 올랐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에 대한 관심이 늘고 목재펠릿 이용 및 열병합 발전 확대, 한옥 수요 증가 등 신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원목가격 상승, 국내 건설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원목 수입은 감소 추세다. 대부분의 목재 수출국이 예전과는 달리 자국 목재원료 보호와 목재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여서 제품 형태의 목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 국산 목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벌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 벌채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산주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가도록 벌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벌채때 발생하는 가지, 후동목 등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했던 임목 부산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벌채와 산물 수집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목재 유통·가공시설 지원, 신규 국산 목재의 수요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에 가기 전 입산통제구역 확인해주세요!

- 산림청 홈페이지, 입산통제구역 검색 웹사이트...
통제구역 줄이고 등산로 대폭개방 -

모처럼 산행길에 나섰다가 행선지가 산불조심기간으로 인한 입산통제구역이어서 돌아오거나 몰래 입산했다가 과태료를 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이런 번거로움을 다시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인터넷으로 전국의 입산통제 구역 실태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월부터 시작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시작으로 전국의 입산통제구역을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로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불위험이 높거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중요한 산림지역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등 공원지역을 제외한 산림 중 30%에 가까운 182만ha가 입산통제구역으로 봄(2.1~5.15)과 가을(11.1~12.15) 산불조심기간 중에 출입이 금지된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휴양하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요산림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전체 산림의 50%정도를 지정해 오던 입산통제구역을 지난해부터 30%까지로 축소했다. 또 80%까지 폐쇄했던 등산로도 국민이 많이 찾는 주등산로를 과감히 개방하며 폐쇄구간을 50%이하로 낮췄다.

입산통제구역 도면 서비스는 산림청 홈페이지 내 산불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을 찾았다가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의 제지로 발길을 돌리거나 모르고 입산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이 크게 줄어든 만큼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봄철에 산을 찾는 분들은 산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말 몰라도 숲해설 들으며 우리숲 즐겨요!

- 산림청, 전국 13곳 숲에 영·중·일어 회화 가능한 숲해설가 배치해 숲 안내 -

숲을 즐기며 숲에 대한 정보를 듣는 숲해설 서비스를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3월부터 수락산, 산음자연휴양림, 대전정부청사 도시숲, 대구 앞산공원,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해남 가학산휴양림 등 모두 13곳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회화가 가능한 숲해설가 16명(영어 10명, 일본어 3명, 중국어 3명)을 배치해 외국인에게 한국의 숲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장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수목 초목 동물 곤충의 생태 뿐 아니라 역사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외국어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 숲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숲해설가를 응원할 때 외국어 회화 능력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숲길 조성·운영·관리할 법적근거 마련돼

-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공포... 숲길 개념정의하고
관리이용 지세화 규정 -

‘둘레길’ ‘올레길’ ‘트레킹길’ ‘산책길’ ‘탐방로’ 등 저마다의 이름으로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던 전국의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숲길의 정의와 조성·관리 방법, 훼손금지 및 처벌규정 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개정·공포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9년 11월 발의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후 1년을 넘기면서 5차례의 심사를 거쳐 완성됐습니다.

개정 법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숲길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은 숲길을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이 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숲길 종류를 이용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했고, 숲길과 유사한 명칭과 형태의 길을 만들 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이 법률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숲길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 등 수립, 숲길 보전과 주변 건조물·농작물 피해 예방, 휴식기간제 도입 등도 규정했고, 이 밖에 숲길 실태조사와 연차별계획 수립, 노선 지정·고시, 훼손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의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숲길의 법제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국민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법권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에서 경관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하며 건강까지 증진하려는 국민의 욕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우리 강, 우리 숲'

- 산림청, 봄철 나무심기 착수...2만ha 3800만 그루 심는다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본격적인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21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그리고 자투리 땅 등에 서울 남산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2만ha의 공간에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 등을 통해 3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면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가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산림청은 특히 올해 식목일(4월 5일)을 전후해 국민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직접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4대강 희망의 숲 나무심기' 행사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대상지는 주민 접근성이 좋고 주변 경관지점(36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국 38곳(한강4, 금강8, 영산강8, 낙동강18)으로 전체 면적은 58만7534㎡다.

이곳에 심겨지는 나무는 해당 지자체별로 수변 생존력, 수리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큰나무 4864그루, 작은나무 3만7235그루와 초화류 등이 식재될 예정이다.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은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민 신청을 받은 뒤 3월 말부터 한달여간 전국 38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희망의 숲' 나무심기는 개인(총알인사 등), 기업, 단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 동안 '희망의 숲'대표 홈페이지(www.4rivers.go.kr/tree)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

청이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해당 지역의 식재 수종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나무를 직접 가져와서 심으면 되고 나무가 없으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130곳)에서 수종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심을 수 있다.

산림청은 참가자들이 이 행사를 통해 애호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신청서 접수 때 '숲' 명칭도 공모한다. 최종 선정된 숲 명칭과 의미에 대한 설명은 알림표지판에 써서 조성구간에 설치할 계획이다.

식재된 나무에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써넣은 개인·가족·단체 명의의 개별 표찰을 달고 참가자들의 추억과 사연은 타임캡슐에 담아 20년간 보관할 예정이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국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자신들의 희망을 담은 수변생태공간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 이름을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으로 정했다"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는 강변 숲은 자연과 지역의 정서가 어우러지는 테마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불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

- 산불전문조사반 167명 봄부터 활동, 9일부터 권역별 실습 뒤 현장투입 -

산불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산불의 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전공 교수, 전직 산림·경찰 공무원, 산림기술사, 산불감식전문가 등 16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내 최초로 9일부터 3일동안 원주 안동 정읍 등 권역별로 열리는 산불현장 감식 실습을 통해 현장 감각을 익힌 뒤 산불 발생시 실제 현장에 투입돼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은 산불전문 조사요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유능 산림공무원 등 29명을 캐나다에 파견해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는 2주간의 산불감식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산불전문조사반은 이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산림청은 올 가을에도 캐나다에 공무원 3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5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지만 산불감식 전문가가 부족해 산불을 낸 사람의 30% 정도만 검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산불전문조사반의 활동이 산불가해자를 검거하고 산불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그동안 국민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산불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 징역이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산불에는 엄한 처벌이 뒤따르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을 하지마시고 산림 내에서 흡연행위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두렁·밭두렁 소각금지"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은 화재방지를 위해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한다. 위반시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과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정월 대보름(2.17)을 앞두고, 쥐불놀이,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 등 특별경계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소방관서 등이 24시간 산불상황을 유지, 초동대처해 나가게 된다.

특히,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산불방지 공조를 위해 오늘 부처합동 브리핑에 이어, 2.16(수)에는 대전청사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국장급)」가 개최되고, 2.18(금)일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전을 상정하여 범정부차원에서 금년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위험시기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해 '불 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사전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각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해 산불로 번진 경우는 연평균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산불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들판, 논·밭두렁 등 들불화재가 1,119건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16명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우선 농산촌 주민에 대한 홍보도 집중 실시해 나가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기동단속을 통하여 엄정한 법적행에 의해 불법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다양한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안전"과 "불조심"을 먼저 생각하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월 7일부터 17일까지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지역축제 행사계획을 미리 검토하고 행사중 안전관리계획 심의,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 시·도 자체 현장안전관리책임제 운영 등 행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통놀이 행사장 298개소에 소방차량 388대와 소방대원 1,447명을, 산림인접지역에는 산불감시인력(2만5천명) 등 안전요원을 사전배치하며,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국 소방 및 산림관서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많은 인파가 운집한 장소에서의 구제역, AI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원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올라가는 산에서 걷어가는 산 전담할 숲길정책팀 뚝다

- 수평적 산행문화추세 반영... 숲에 역사·문화적 가치까지 불어넣을 것 -

산림 생태와 그 역사·문화를 체험하며 경관을 즐기고 건강까지 증진하도록 하는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전담할 산림청(청장 이돈구)의 숲길정책팀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위로 올라가는 수직적 개념의 등산문화가 수평적 걷기 개념(트레킹)의 산행문화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월부터 산림이용국 소속으로 새로 출범한 숲길정책팀은 기존의 등산로와 등산 관련 지원업무를 포함해서 등산·트레킹과 레저스포츠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을 본격 개발해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국정과제로 제시된 '숲길 조성사업'(2012년까지 1000km) 목표 달성, 산림생태와 지역 역사·문화 발굴, 숲길 주변 경관가치 재창출, 국민건강 증진, 지역사회 문화·경제적 활력 증진 등의 업무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 숲길정책팀장이 된 최광철 서기관은 "우수한 산림생태 체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문화적 가치를 숲길에 불어 넣는 데 신경을 써 국민에게 감동을 주도록 하겠다"며 "국회 계류 중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공포되는 대로 숲길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막화방지 중요성 알리고 글로벌리더 자질도 키우세요!

- 초중고생 녹색홍보대사 모집...몽골서 나무심고 UNCCD 참관할 기회도 -

산림청은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녹색홍보대사를 선발합니다.

오는 10월 경남 창원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200여일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사막화 방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범세계적인 사막화방지 운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UNCCD 청소년 녹색홍보대사'로 선정되는 청소년 100명은 먼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5월부터 4개월 동안 각종 자료를 통해 세계의 사막화 지역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활동도 하고, 8월에는 환경 전문가들의 강연회에 참가하고 사막화 방지 대국민 도심 홍보캠페인도 벌입니다.

이들 중 활동이 우수한 청소년들은 5월에 실시될 '몽골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해 해외 원조(ODA) 사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또 10월 UNCCD 제10차 총회를 특별 참관하고 부대 행사에서 세계 대표단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녹색홍보대사 활동상황을 발표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홍보대사 활동을 산림청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소년잡지 월간 '과학소년'이 운영하는 온라인(<http://cafe.naver.com/sboyfriend>) 카페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심사 및 논술과 토론대회를 거쳐 4월 19일 최종 홍보대사단 100명을 선정합니다.